

# [월간 고용시장 모니터]

## 2010년 11월 고용시장 분석

---

2010.12.20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

### 목 차

1. 2010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2. 비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증가
3. 고령 노동인구
4. 글을 마치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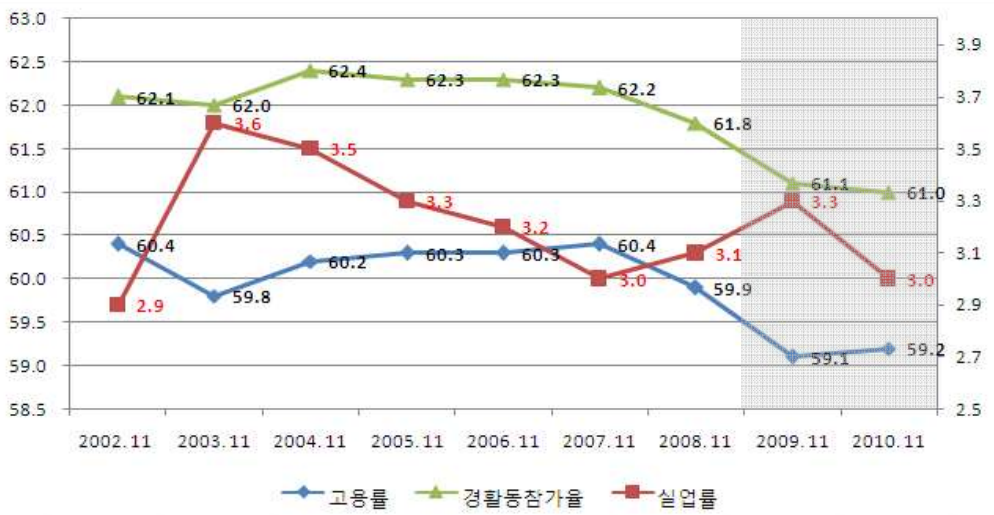
<http://saesayon.org>

요약

□ 2010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 2010년 11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59.2%, 61.0%,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0.1%p 하락, 0.3% 하락([그림 1] 참조)
- 2009년 11월보다는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취업자는 2,410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 3천명 증가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제조업, 건설업 등 전산업에서 취업자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원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수출호황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에서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임
- 이러한 취업자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인가에는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고용인원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는가와, 원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수출호황이 계속될 것인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 비경제활동인구는 15,9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7천명 증가

[그림 1] 2010년 11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단위 : %)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참조,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 비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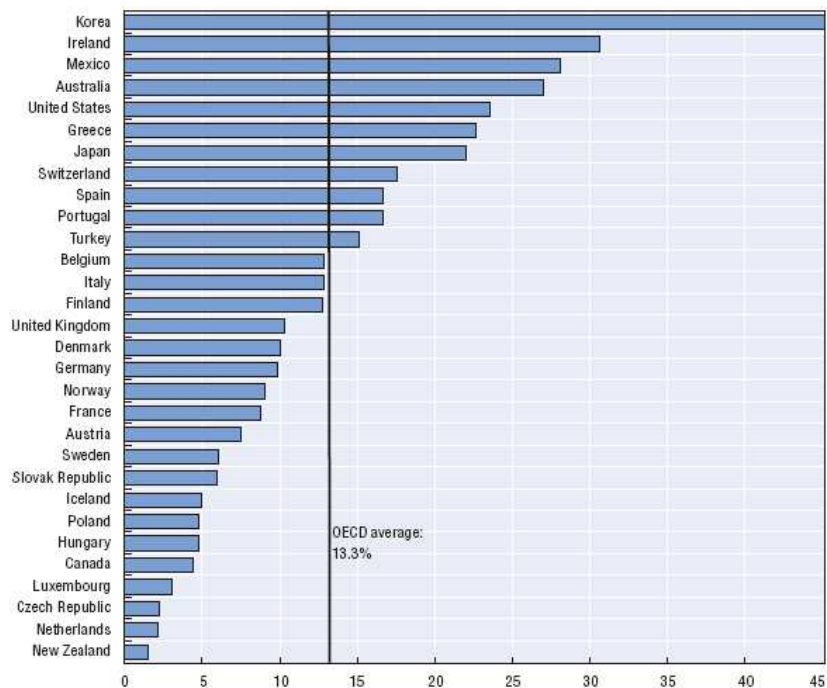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킴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업률을 과소평가하게 함
- 구직단념자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취직이 되지 않아 구직을 포기하고 집에서 가사나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들이나,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을 포기한 학생이나 졸업을 연기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이 경우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서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짐
- 금융위기 이 후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지만 노동시장 여건 상 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지수의 개발과 함께,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채용 인원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과 같은 제도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고령 노동인구

- 우리나라 고령노동인구의 경우 심각한 빈곤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일자리를 잃을 경우 생계에 있어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큼
- OECD 내에서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임

[그림 2] 2000년대 중반 고령자 빈곤율 (단위 : %)



※ 출처 : OECD (2009) Pension at Glance

-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를 통해 가구주연령대별 상대빈곤율을 구해보면, 60대의 경우 37.5%, 70대 60.9%로 나타남(상대빈곤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조)
- 가구유형별로는 60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손자녀들로 이루어진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64.4%)이 다른 가구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금제도나 공적지원제도가 아직 미비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가구주 가구의 상당수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가구들의 경우 가구주가 일 자리를 잃게되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고령자가구주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연금제도를 안착시키고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시점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글을 마치며

- 경제성장률이 +로 돌아선 것만을 가지고 경제회복을 달성했고, 이제 경제성장단계로 돌아섰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경제성장률로 보면 경제가 회복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고용상황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임
- 고용수준에 있어서의 회복을 이루는 것 역시 경제회복의 조건임
- 정부는 5% 경제성장과 함께 28만명의 취업자 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루어야 함
-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만이 경제성장이 아니라 고용증가 역시 경제성장이며, 국민들의 느끼는 생활수준의 개선은 고용증가, 고용의 질 향상에서 비롯된다는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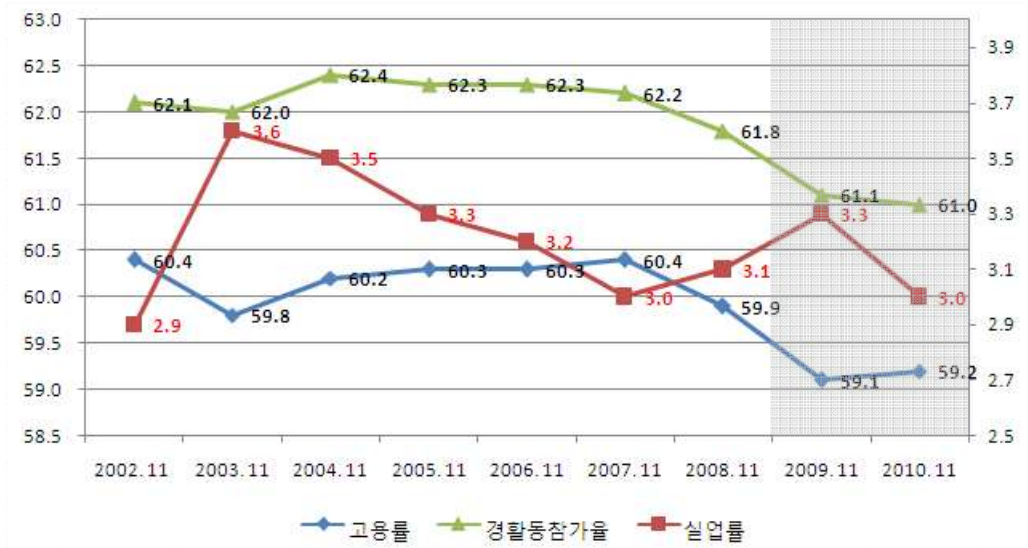
본문

1. 2010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그림 1] 참조)

-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1월 고용률은 59.2%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되었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11월보다는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지난 10월과 비교할 경우, 고용률은 0.2%p 하락, 실업률은 0.3%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0.4%p 하락

[그림 1] 2010년 11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단위 : %)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참조,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 취업자

- 취업자는 2,410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 3천명 증가(지난 10월 대비 6

- 만 3천명 감소)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12만 9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7만명), 농림어업(-5만천명)을 제외하고 제조업(28만 4천명), 건설업(5만명) 등 전산업에서 취업자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수출호황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취업자 수로만 보면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늘어났음([그림 2] 참조)
- 반면,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의 경우 계속해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희망근로 등의 정부고용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임.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부가 20만명 정도 더 많은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그림 2] 참조)
- 취업자 수에 있어 지금과 같은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와 정부의 예산투입으로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현재와 같은 취업자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그림 2] 제조업과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의 취업자 추이 (단위 : 명)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7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2천명 감소
- 계절적 요인과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채용예정자의 채용이 실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비경제활동인구는 15,9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7천명 증가, 성별로는 남성 11만 1천명, 여성 14만 6천명 증가
- 활동상태별로 보았을 때 가사(21만 5천명), 재학·수강(9만명), 연로(4만 9천명),

- 심신장애(1만명), 쉬었음(4천명)에서 증가한 반면, 육아(-10만 3천명)에서는 감소
- 구직단념자는 21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5천명이 증가하였고, 취업준비자는 5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명 증가
- 실업자의 감소는 취업자의 증가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도 실업자의 감소가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낮은 실업률은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음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실업으로 계산되지 않는 실질적 실업 인구에 대한 통계가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 비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증가

### □ 비경제활동인구의 의미

- 사전적 의미 : 만 15세 이상인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sup>1)</sup>를 제외한 인구를 가리킴
- 사전적 의미를 따를 경우,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용어

### □ 비경제활동인구 분류의 문제점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실업률을 과소평가하게 함
- 구직단념자<sup>2)</sup>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취직이 되지 않아 구직을 포기하고 집에서 가사나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들이나(가사, 육아), 취업이 되지 않아 고시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졸업을 연기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경우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재학·수강 등)
-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려 하던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을 포기하고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게 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게 되고 실업률은 낮아짐
- 마찬가지로 취업이 오랫동안 되지 않자 취업을 포기하고 고시를 준비하거나 학교로 다시 돌아 간 경우, 또는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실업률은 줄

1)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으로 구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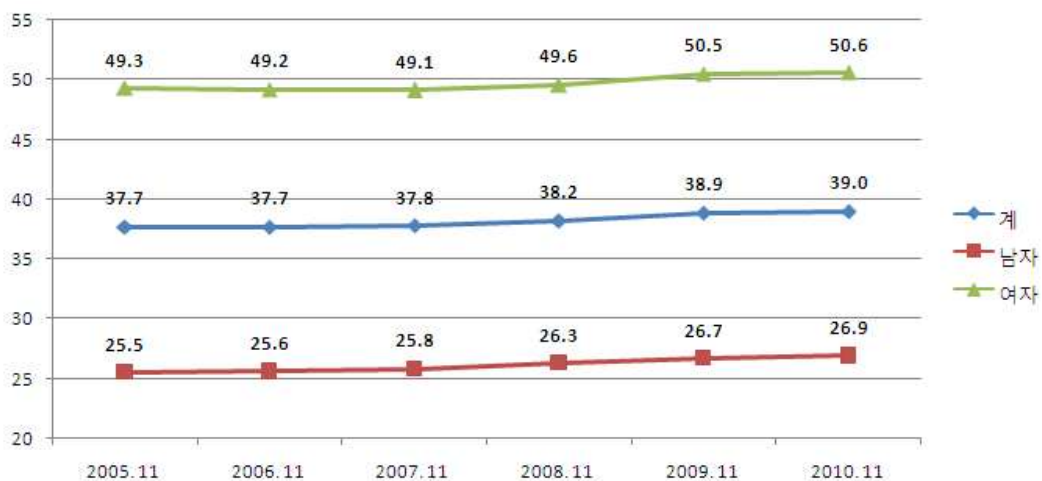
2)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어들어 고용상황을 잘못 평가하게 할 수 있음

□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그림 3] 참조)

- 금융위기 이 후 2010년 들어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은 개선되는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고용률이 개선되는 경우는 취업자 수가 늘어난 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실업률의 감소의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실업률 감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
- 금융위기 이 후 지속적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지만 노동시장 여건 상 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가운데에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채용 인원을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시 되어 온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과 함께 결혼, 출산, 육아 등이 퇴직이나 나쁜 일자리로의 이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현실화되어야 함

[그림 3]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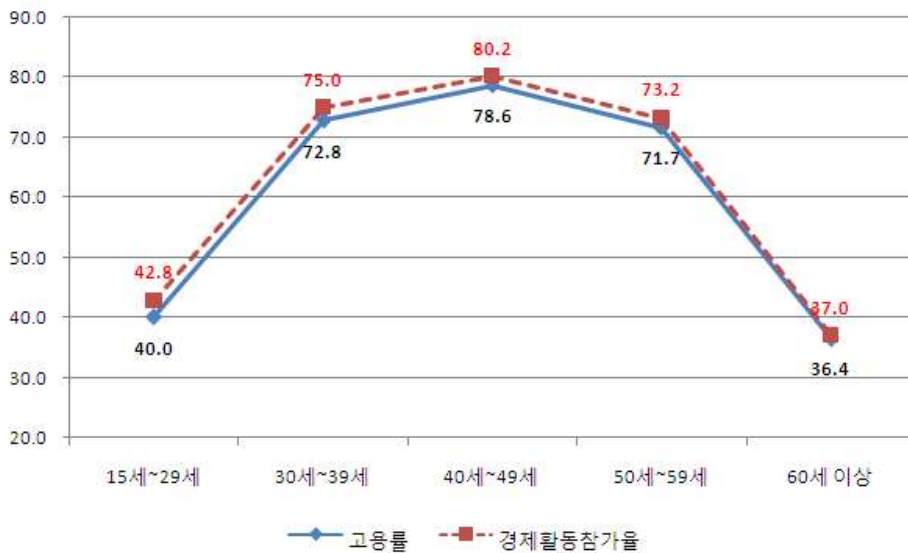


### 3. 고령 노동인구

#### □ 고령자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 연령계층별로 보았을 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1.2%p 감소(남성 0.9%p 감소, 여성 1.2%p 감소)
- 일반적으로 고연령층은 청년층과 함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연령계층, [그림 4]는 2010년 11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구한 연령계층별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청년층의 경우 취직보다 학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기 때문이지만, 최근의 낮은 고용률은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음
-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경우 직장에서 은퇴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장년층에 비해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음

[그림 4] 연령대별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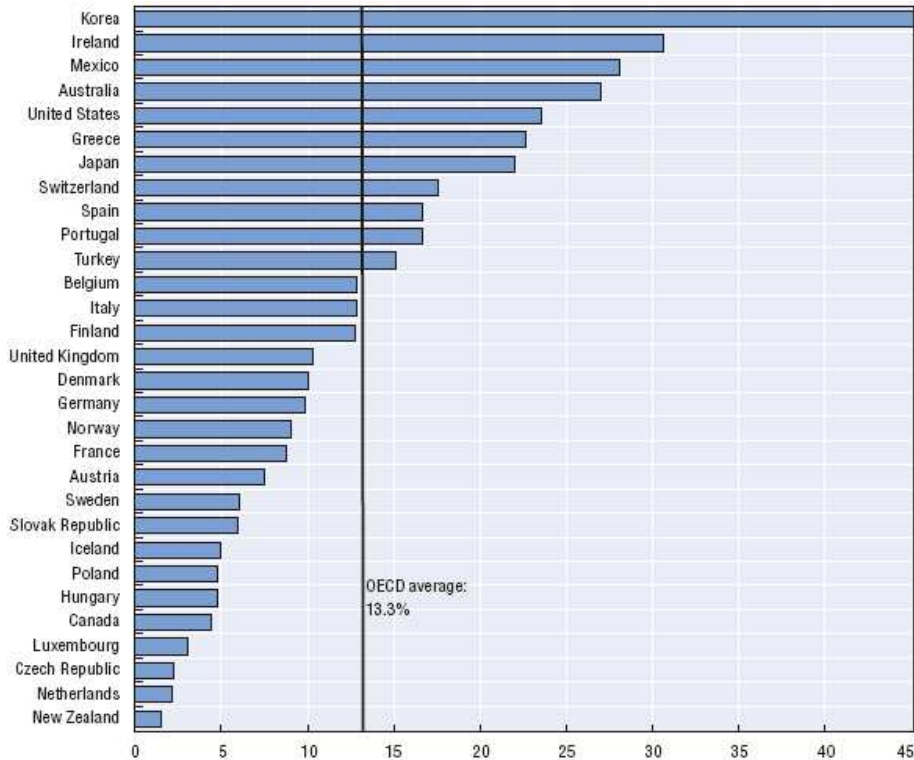
#### □ 우리나라 고령가구주 가구의 빈곤

- 우리나라 고령노동인구의 경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 OECD(2009)<sup>3)</sup>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았을 때, 한국의 고령자 빈곤율은 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OECD 평균이 13.3%이고 35% 이상은 한국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3) OECD (2009) *Pension at Glance*, OECD.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그림 5] 참조)

[그림 5] 2000년대 중반 고령자 빈곤율 (단위 : %)



※ 출처 : OECD (2009) Pension at G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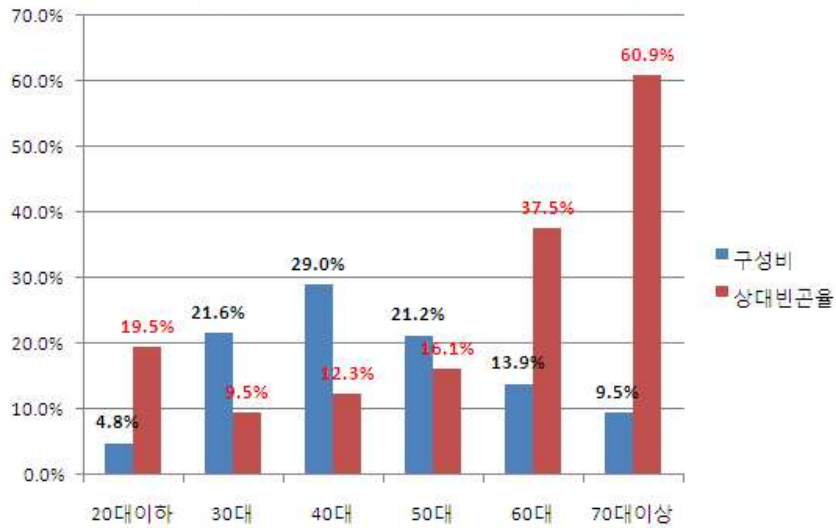
- OECD는 우리나라 고령자 빈곤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공적이전소득의 부재를 꼽음
-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소득에서 공적이전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27개 조사국 중 26번째에 해당하며, 국민순소득(NII) 대비 연금지출의 규모는 1.8%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OECD, 2009<sup>4)</sup>; OECD, 2009<sup>5)</sup>)
- [그림 6]은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가구주 연령대별 상대빈곤율<sup>6)</sup>을 구한 결과로,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음

4) OECD (2009) *Society at Glance*, OECD.

5) OECD (2009) *Pension at Glance*,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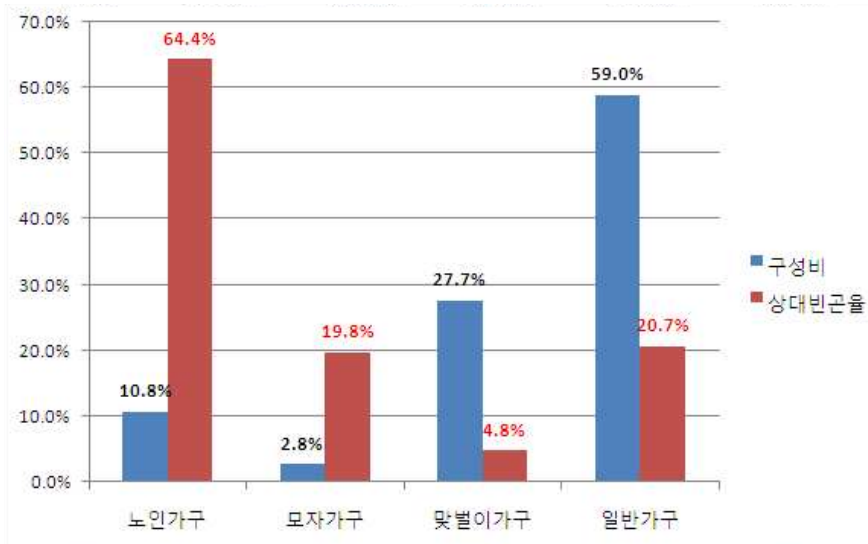
6) 여기서 상대빈곤율은 OECD에서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인,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구해 그것의 50%를 빈곤선으로 놓고, 균등화 가구소득이 빈곤선 아래인 가구들을 빈곤가구로 보는 방법을 택했다. 이 때 가구소득으로는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을 사용했다.

[그림 6] 연령대별 상대빈곤율 (단위 : %)



- [그림 7]은 위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 가구유형별 구성비와 상대빈곤율을 구한 결과로 60세 이상의 노인과 손자녀들로만 구성된 노인가구<sup>7)</sup>의 경우 다른 가구유형보다 상대빈곤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가구유형별 상대빈곤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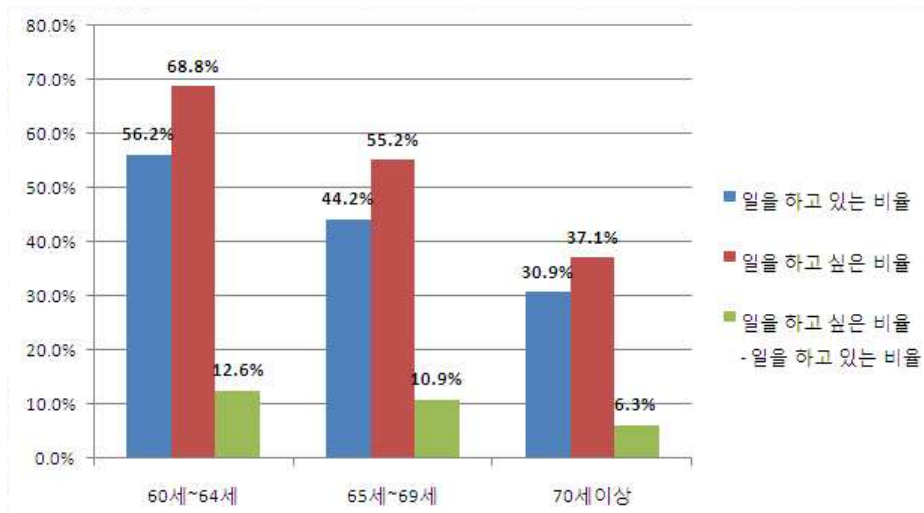


7) 통계청에서는 “노인가구”를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배우자와에 같이 사는 가구원이 있다면 이들이 18세미만의 비경제활동인구인 미혼자녀 및 손자, 손녀 등인 경우를 말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고령자 고용을 저하를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금제도나 공적자금 조성 등이 필요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제도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고 공적자금을 통한 고령자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
-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가구주 가구는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런 가구들의 경우 고령자 가구주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그림 8]은 통계청의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 둘 간의 격차를 살펴본 것임
- 이에 따르면 상당수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므로 고령자가구주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연금제도를 안착시키고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시점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그림 8] 60세 이상 고령자의 일하고 있는 비율과 일을 하고 싶은 비율



4. 글을 마치며

□ 경제회복?

- 경제성장률이 +로 돌아선 것만을 가지고 경제회복을 달성했고, 이제 경제성장단

계로 돌아섰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경제성장률로 보면 경제가 회복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고용상황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임
- 고용수준에 있어서의 회복을 이루는 것 역시 경제회복의 조건임
-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내년도 경제성장률 5%, 취업자 수 28만명 증가**

-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로, 취업자 수는 28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4.5%), 한국개발연구원(KDI)(4.2%), 삼성경제연구소(3.8%) 등 민간부문의 예측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음
- 정부의 전망이나 다른 연구소들의 전망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환율임
- 현재와 같은 원화 가치 하락국면이 유지되고 그에 따라 현재의 수출호황 또한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와 같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음
- 여전히 불안정한 세계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또다른 경제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5% 경제성장과 함께 28만명의 취업자 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루어야 함
- 실제 이는 작년 취업자 수 증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고용율에 있어 높은 수준의 회복을 보이지 못하였음
- 생산가능인구가 전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28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할 경우 고용률은 59.8%가 되는데, 이는 경제위기가 드러나기 시작한 2008년 말 수준과 비슷함
- 이전과 마찬가지로 생산가능인구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융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자리 증가가 필요함
-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만이 경제성장이 아니라 고용증가 역시 경제성장이며, 국민들의 느끼는 생활수준의 개선은 고용증가, 고용의 질 향상에서 비롯된다는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